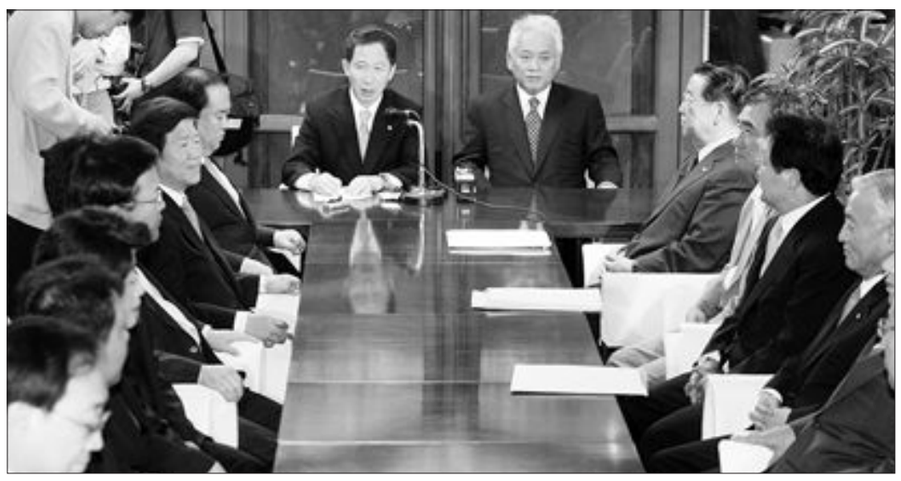
與 '정책갈등' 난기류 가속화

부동산·출자총액제·대북송전사업 등 갈등전선 확대일로

비대위 정책기조 수정 조짐에 친노·개혁세력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비대위원 15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5·31 지방선거의 참패원인과 정국 대응방식을 놓고 통렬한 '자아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비대위의 주요 정책 기조 수정 조짐에 대해 친노 및 당내 개혁그룹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여권내 정책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및 세제정책을 놓고 빚어졌던 갈등은 출자총액제, 한미 FTA, 대북 송전사업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갈등 전선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그 양상이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동**=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조적 논리로 정책기조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당의 정책 기조 수정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 이날 노 대통령은 "변화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한다"며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기존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은 자기 혁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정부가 먼저 혁신해서 열린 자세로 과거 불신 요소를 제거하면 저항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노 및 개혁세력**=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일부 개혁파 의원들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파의 이목희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선거에 패배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강해서가 아니라 집값, 땅값을 못 잡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정책위가 12일 대북 송전사업 예산배정을 유보한 데 이어, 13일 저출산·고령화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예산 증액안에 '비토'를 걸고 나오자 개혁진영에서는 "정체성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정책"이라며 "당의 정책라인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북 송전사업 예산배정 유보를 놓고도 친노직계 의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한 친노직계 의원은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스톱한 것처럼 여론이 인식하게 한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북 송전사업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일종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당 정책위는 '제동'이 아니라 '재논의'라고 극구 해명하고 있다. 정부 측이 예산배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마련과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자제 당부**=여기저기에서 갈등이 표출되자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새 체제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당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깔고 있다. 특히 김근태 당의장으로서는 취임하자 마자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빚어지고 있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할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질서있는 토론의 광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되 절차와 방법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마케팅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단편적 정책 하나하나를 갖고 매달리면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책임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韓·獨 닮은꼴 여성총리 만났다

〈한명숙〉 〈메르켈〉

사상 첫 女재상·사회운동·공직 경력 등

베를린서 양국 우호협력 증진방안 논의

〈한명숙 총리〉

〈메르켈 총리〉

인생 역정에서 '공통분모'가 많은 한명숙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연방 총리가 14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졌다.

두 총리는 양국의 사상 첫 여성 재상인데다 분단 국가의 경험, 사회운동, 공직 경력 등에서 비슷한 행로를 밟으면서 총리직에 오른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당초 45분간의 회담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대신 순차 통역이 아닌 동시통역 지원을 받으며 평화문제, 남북문제, 통상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1944년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중 부모를 따라 월남한 한 총리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분단의 한을 보고 느끼며 자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성운동가로서 통일과 평화운동에도 참여해 왔다. 한 총리에 비해 열살이 적은 메르켈 총리는 서독 함부르크 태생으로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동독 브란덴부르크로 이주, 라이프치히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일해 '분단 동.서독'을 모두 경험했다.

사회운동에 투신한 경력도 공통점으로, 한 총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 여성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도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동독 민주화운동단체인 '민주개혁'에 가입해 활동했다.

또 한 총리가 여성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거쳤고, 메르켈 총리도 여성청소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등의 각료 경험을 쌓아 총리에 오르기까지 공직경험도 유사하다.

두 사람은 '부드러운 카리스마'(한명숙)와 '독일의 마거릿 대처'(메르켈)라는 별칭처럼 리더십 스타일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독일을 방문, 메르켈 총리를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까지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르켈 총리도 한 총리 취임때 축하서한을 보내 "조국의 분단으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며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메르켈 총리의 개혁과 외교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에 메르켈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베를린=연합뉴스

27개월만에 물러나는 박근혜 대표

탄핵 후폭풍속 침몰위기

한나라당 구원투수 등장

총선·재보선 승리 이끌고

어엿한 대권주자 반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6일 2년3개월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운 대표를 뽑는 내달 11일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권출마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박 대표가 지난 2004년 3월 탄핵 후폭풍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한나라당의 과도 대표로 선출됐을 때만 해도 대선후보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 지금의 위상을 예견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영남 정서와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 '침몰'만은 막아보자는 '최후의 카드'로 박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카드'는 20여일 뒤 4·15 총선에서 121석 확보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데 이어 이후 다섯차례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모두 승리로 이끄는 '상승군(常勝軍)' 효과를 내며 박 대표를 어엿한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물론 이런 데는 정부·여당의 거듭되는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한몫했지만 박 대표 개인의 대중적 기반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4·30 재·보선 때 경북 영천과 올해 5·31 지방선거 때 대전의 경우 불리한 판세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서 역전승을 견인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

연전연승 가도에 힘입어 초창기 불안하기만 하던 당 장악력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고 소위 '친박'계로 불리는 지지세력도 몸집이 커졌다.

박 대표는 행정도시 입법,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당쇄신안, 사학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와중에서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의원 등 '3선 3인방'과 소장·개혁파의 '반박' 공세를 견뎌내는 강단과 뚝심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동욱기자 tuim@

전남도 7월 정기인사 '술렁'

행정부지사 내정·인사교류 등

고위급 연쇄이동…사상 최대 예고

전남도가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공석 중인 행정부지사가 다음주 초 부임하고, 몇몇 고위직 간부가 인사교류 형식으로 서울로 자리를 옮길 보이는데다, 20여 명의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 등 인사 요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가 바뀐 지역도 적지 않아 이번 인사의 폭과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공석 중인 행정부지사에 김영록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을 받기 위해 14일 행자부에 임용제청을 했으며, 인사교류 차원에서 이개호 기획관리실장의 행자부 전출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배용태 기업도시기획단장도 행자부 이 모 씨와 함께 인사교류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연쇄이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경제 분야를 강화하고 행정·지원분야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다음달 말 단행할 계획이어서 승진과 전보 등 인사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기구와 정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부서와 전략산업 육성 부서, 농어촌 면 단위 재개발 및 마을 재정비 담당 부서 등을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인 전남도의회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7월 말께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부군수 2명과 과장급 6명 등 서기관 8명을 비롯 모두 25명의 1947년생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승진과 전보 등 인사 폭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